

너무나 근엄한 비전, 와닿지 않는 정책

위기의 근원 무엇일까



이효인

연극영화학과 교수

“정해진 교과과정과 정해진 학기, 정해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21세기형 교육이 아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중심의 사회로 전환할 것이다. … 그러므로 변화 없는 교육, 교과 중심의 교육, 교수 중심의 교육, 캠퍼스 중심의 교육은 더 이상 21세기형 교육이 아니다.” (서울신문, 2016.5.22.) 이 글을 쓴 이현정 교수는 그의 저서 「왜 대학은 사라지는가」에서 캠퍼스 없는 대학(Campusless College), 학습 패키지 시대, 단위 중심 대학 시대(Unit-Based Colleges) 등의 10대 트렌드와 학생 유치와 양질의 교육을 위한 3A(Adult, Abroad, Accountability) 전략, 캠퍼스를 떠난 변화 중심, 수익형 캠퍼스 체제 구축, 특화 대학원 교육 중심, 대학의 작품화, 질 관리 전략 수립 등의 10대 전략을 제시한다. 물론 이현정은 판박이식 대학 개혁을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 소르본대학과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대학의 인문교양 교육을 언급하는 것 또한 빼먹지 않고 있다. 여하튼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대학 재정의 위축이라는 3대 조건에 놓인 21세기형 교육과 멀어져 버린 대학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순 없을까 지금의 현실에서 위의 주장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발언은 대부분 공통된 내리티브 전략을 취한다. 이른바 ‘위기-전략 제시-희망과 위로’라는 3막 플롯이다. 이 플롯은 대중적인 영화처럼 너무나 편집성(verisimilitude)이 있는 탓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매 플롯은 ‘진짜처럼 보일 뿐’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전히 대학인들은 정해진 교과과정과 평가에 익숙한 나머지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거나, 프레젠테이션 도구 하나 없이 분필 하나 만으로도 여전히 훌

륭한 강의를 이끌어가는 교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을 둘러싼 ‘위기의 인식’부터 동의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전략도 결국 교수-직원-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며, 특히 교수-교직원들의 7, 8할 이상이 동의하고 참여할 때야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나의 질문은, 대학 자체의 소멸 혹은 ‘빅뱅’을 향해 가는 과정에 놓인 대학인들이 이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오갈 데 없는 무명 학자 시절 교토대로 부터 20년의 연구 기회를 부여받았던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결국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교토대에서는 출석을 부르지 않는다. 또 전공계열을 가리지 않고 수강하는 ‘포켓 세미나’ 200개 과목이 있는데, 어류심리학 입문, 태

아의 3차원 입체모형 제작, 추모시설과 교육, 야생동물과 동물원 과학 등 해외한(?) 과목도 있다. 교수들은 자원봉사로 학생들의 현장 활동 지도도 한다고 한다.(ebs TV, 2014) 교토대의 인문과학연구소 소속 교수들에게는 아무런 의무 사항이 없다. 책임 강의 시수나 논문 제출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반면 도쿄대에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전 세계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정보학대학원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국가 정책 수립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한다.

언급한 대학들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구체성에 있다.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책은 실행 가능한 것인가, 비전은 정말 미래 전망을 담고 있는가? 국내 대학 위기의 본질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교육’과 ‘동의하기 힘든 정책 제시’에 있는 것인가? 정해진 교과과정과 교수



참여마당

김정현
(언론정보학 2016)



“뭣이 중현디?”

언론에는 다양한 사상과 가치가 존재한다. 신속성, 대중성, 이슈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는 바로 공정성이다.

언론이란 우리 사회의 언어다. 다양화, 다원화된 사회에 속해있는 개인은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중에서도 꼭 알아야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언론이 제공함으로써 개인은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회를 구성해간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꼭 알아야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언론이다. 언론이 ‘중요하지 않고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개인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언론이 공정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버린다. 하지만 언론의 공정성은 상당히 많은 위협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MBC 언론 노조 총파업 사건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언론장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속에 KBS, YTN, 여러 신문사가 함께 참여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하였다.

위험받는 언론의 공정성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무한도전’, ‘해를 품은 달’과 같은 예능, 드라마 등과 파업에 동참하면서 언론 공정성이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의식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고 낙하산 인사인 MBC 사장이 사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200여명의 기자와 PD가 해고당했다.

수천수만 명의 인파가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다면 그 주제가 무엇이든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일일까? 어째서 이러한 사실을 지상파 뉴스는 말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조그만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일까. 2012년, 언론의 공정성을 외치며 투쟁하던 언론인들은 왜 지금 침묵하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들은 해고되었다. 문제제기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총파업으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는 발전했는가?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부분 발전했다고 본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1인 미디어의 성장을 통해 비단 언론사만이 언론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판단이 서로 공유되며 공론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 언론사들의 탄압과 편파성에 반발해 생긴 다양한 대안 언론 역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장점은 단점과 함께 있다. 다양한 목소리에는 겸증되지 않은 사실을 단지 소리 높여 말하고 있거나, 대중을 선동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시각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몫이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